



많은 정치인들이 확대를 공약하는 사회 보장 제도 역시 민간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 보장을 약속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더 부유한 은퇴를 예상하게 되고,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줄인다. 의료 보험 제도는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위해 저축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자본세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을 감소시키고, 저축 유인 역시 감소시킨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개인소득세 역시 빠질 수 없다. 다른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증가 역시 실제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성공적인 저축자들의 저축 동기를 손상시킨다.

오랫동안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해온 통화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약화시켰고, 실업급여 역시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적 자기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매년 5조 달러 이상 지출되는 빈곤구제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감소시킨다. 예컨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정부가 식사를 보장한다면 그 만큼 저축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투자의 낙관적 약속도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을 지탱하기 위해 국민의 저축과 투자 노력을 엄청나게 감소시킨다는 점 역시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unseen-costs-of-government-investments/>